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월 10일 개원

**국**내 최초의 Full 디지털 종합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정상철)이 7년여의 오랜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5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정상진료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준공식을 가진데 이어 의료장비 Set-up, 의료진 등 필요인력 배치 및 건물 내의 부 마감공사 등 하드웨어 완성은 물론 수차에 걸친 의료장비 가동 및 모의환자를 통한 진료시스템 리허설을 실시하였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5월 10일 정상진료 시작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검증 절차를 거쳤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노인병센터, 심장센터, 뇌신경센터, 폐센터, 관절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6개 센터와 총 23개 진료과 등을 두고 있으며 교수 120여 명, 임상강사(전문의, Fellow) 80여명, 전공의 240여명, 간호사 530여명 등 총 1,3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본원 의술을 그대로 이어감은 물론 노인 및 성인질환에 대한 국가 중앙의료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완벽한 디지털 의료 시스템 구축, 질병별 전문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 진료 및 응급센터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원자력 및 RI 동정

정부 새 방침에 지자체 반발

**정**부가 양성자 가속기와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부지 선정을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국가 과제인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부지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합의해 매립장 유치를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선 양성자 가속기 후보지 선정 때 특별 가산점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큰 이권이 걸려 있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주는 대가로 그동안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부지를 선정 못한 채 표류해 온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온 전북. 대구. 전남. 강원 등 4개 광역단체는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며 만반의 준비를 해와 1.2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속기 유치를 자신하고 있는데 이제 와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활동을 펴온 대구시는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초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처사”라며 “당초 선정 원칙,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입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 역시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과 함께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영광군의 지형적 조건, 주변 환경 등이 뛰어나 다른 경쟁지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결정이 연기돼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선 시민, 환경단체들의 반대. 찬성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경북 울진. 영덕과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북 고창군 핵폐기장 추방 대책위는 “양성자 가속기를 미끼로 혐오시설인 방사성 폐기물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며 “지자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측 주민들은 두 사업을 함께 받아들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방사성폐기물 유치위원회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두 사업이 우리 고장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따논 당상’이나 마찬가지로”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고창 유치추진 본부도 “두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받아들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방침으로 두 사업의 후보지는 사실상 전남과 전북 두곳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로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신청한 광역지자체는 이들 두곳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로는 유일하게 두 시설의 대상지

로 함께 거론되는 영광군이 일단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영광군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들이 연계방침을 수용해 가속기사업을 찬성할 경우 적극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도 방사선기술(RT)산업 특화차원에서 이를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결정된 정읍의 방사성 이용연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관련산업이 집적화 돼 막대한 정부지원과 엄청난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양성자 가속기 적격 후보지 발표는 이번 연계 방침에 따라 3개월 뒤로 미뤄져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부지와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자 가속기는 수소를 방전시켜 얻은 양성자를 초속 수백km부터 빛의 속도인 30만km까지 가속하는 장치로 신소재 개발 등 각종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21세기 핵심 프린티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격 가동되면 연 1조3천여억원의 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추산된다.

## 대한방사선비상진료협의회 창립

**방**사선 사고에 대비한 의료구호 체계를 확립하는 ‘대한방사선비상진료협의회(회장 김중순)’가 11일 르네상스호텔 4층 루비룸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본격 가동했다.

협의회는 원자력산업시설 증대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 재해대책 수립과 연계해 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 △방사선 관련자료 공유 및 정보 교환 △방사선비상진

료교육·훈련의 표준화 및 교육 이수자 인력관리 △방사선 의학, 기술, 역학적 연구개발을 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전국의 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화생방사령부 및 중앙 119구조대를 포함한 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간호사, 의료기사 등 방사선 응급진료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이 협의회의 사무국은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설치된다.

## 방사능폭탄 보호약 개발

**영**국 BBC 인터넷판은 8일자에서 방사능을 함유한 이른바 ‘더러운 폭탄’의 피해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홀리스에덴 제약회사는 최근 더러운 폭탄의 방사능 공격시 근접현장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HE-2100’이라는 약을 개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초기 실험 결과 이 약은 체내에서 방사능 공격으로 인한 백혈구의 감소를 막고, 출혈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러운 폭탄 공격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선은 인체의 감염을 막는데 필수적인 백혈구를 파괴하고, 피의 응고를 막아 다량의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이 회사의 의학팀은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영국혈액학회 연례총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최근 동물 대상 실험에서 백혈구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팀은 방사능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홀리스에덴사는 앞으로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 같은 사람과 유사한 동물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추가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밥 마셀라 사업개발담당 부사장은 “추가 실험에서 같은 결과를 얻을 경우 식품의약품(FDA)에 시판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약값은 50달러에서 75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월성원전 주변 방사선량률 측정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량률이 측정된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월성원전 반경 2km 주변 지역 13곳에 대한 공간방사선량률을 측정해 방사선 영향조사의 기초자료로 삼기로 했다.

시는 원전 주변지역이 아닌 2개소에 대해서도 방사선량률을 측정해 비교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원전측과 합동으로 해당지역 비상방송시설 기기류를 점검하고 비상방송망 난청지역을 조사했다.

이 합동점검에서는 메인앰프 1대와 로컬앰프 19대, 스피커 52대를 포함해 시청-원전 직통통신망과 회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원전주변 지역에 대해 비상시

원활한 대피와 대책시달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방사선 관련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방사선량률을 측정한다”고 밝혔다.